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 광양항 '거점항만' 입지 흔들

정부 '투포트' 육성정책 사실상 파기
'북극항로' 대비 부산항 집중 육성
광양항 투자·지원 부족...기능 위축
물동량 감소 광양시 재정여건 악화
"수심 확보·대형 선박 유치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과거 '투포트(Two-Port)' 정책으로 부산항과 함께 집중 육성됐던 '광양항'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북아시아 핵심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광양항의 항만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항만 정책과 예산이 부산항에 집중될 경우 광양항은 기술 실증 중심의 보조항만으로만 머무르게 돼 사실상 거점항만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임대라도 활용해 조속히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국민체감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항만 정책의 지역 편중 가능성을 우려하며, 광양항에 대해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항은 국내 제2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최근 이차전지 원료 수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투자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거 부산항과 함께 국내 대표항만으로 불렸던 광양항은 정부의 '투포트' 정책을 통해 부흥했으나, 갈수록 정책 지

국내 주요 항만 연도별 컨테이너 물동량			
항만명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2020년	2182만	327만	215만
2021년	2270만	335만	212만
2022년	2207만	319만	186만
2023년	2315만	346만	186만
2024년	2440만	355만	201만

(단위: TEU,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

원이 축소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에 따라잡히며 3위로 내려앉는 등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항의 최근 5년간 물동량은 △2020년 2182만TEU (20피트 컨테이너 1개) △2021년 2270만TEU △2022년 2207만TEU △2023년 2315만TEU △2024년 2440만TEU로 2022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감소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광양항을 제치고 국내 2위 항만으로 올라선 인천항 또한 △2020년 327만TEU △2021년 335만TEU △2022년 319만TEU △2023년 346만TEU △2024년 355만TEU로 부산항과 동일하게 2022년 소폭 감소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양항은 △2020년 215만TEU △2021년 212만TEU △2022년 186만TEU △2023년 186만TEU △2024년 201만TEU로 감소와 정체, 소폭 반등을 지속하고 있다.

광양항 물동량 감소로 광양시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광양시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재정여건 변화'에 따르면 2024년 광양시의 세입 예산은 총 5130억원으로 지난 2023년 대비 600억원 가량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광양항에 오는 2029년까지 7464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부두 4선식 규모의 기반 시설 구축 및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 등으로 부터 착공 계획, 비전 및 로드맵 등의 설명을 듣고 있다.▶관련기사 3면

김양배 기자

尹 오늘 영장 심사... 특검 "구속수사 불가피"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등 혐의
경찰, 법원 주변 집회 총력 대응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본격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협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할 염려 등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중앙지법 주변에 경력 30여개 부대 약 2000명과 안전 펜스를 비롯한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상대로 전격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자택,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 했던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에 수사진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한걸음 더, 주민에게!
한번 더, 치안친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 한 안전전남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치치안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과학치안 기반의

미래범죄 예방 전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

주민참여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확대

성과 분석을 통한

치안 만족도 제고